

‘2030 남성은 극우’라는 고약한 프레임

에스프레소

이 동 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2030 남성들의 우경화는 올 상반기 진보 진영 내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된 주제 중 하나다. 서부지법 사태에서 본격적으로 촉발된 이 논쟁은 대선을 거치며 그 열기를 더했다. 출구 조사 결과가 진보 성향 지식인들과 지지층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까닭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상수로 바라보고 있던 이들은, 과연 그가 득표를 과반으로 확실한 국정 운영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 그런데 20대 이하 남성에서는 고작 24%가, 30대 남성도 60대 남성보다 10%포인트는 적은 37.9%만이 이 대통령에게 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 득표를 자신하던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극우가 된” 2030 남성들을 버리고 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끌어안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대선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도 이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30 남성 극우화의 논거는 정치적 성격을 띤다. 요컨대 정의감에 불타야 할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여성 혐오” 이준석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여의도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땐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난

이 덧씌워졌다. 오히려 풀고 가져. 2030 남성들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서부지법 사태만 해도 20대 가담자는 소수였다. 30대 남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건 사실이지만 40대 이상 중장년도 그에 못지않았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과 미디어가 사람 수가 많은 30대에 20대를 붙여 “2030이 절반”임을 강조했다. 일부의 극단적 행동을 마치 청년 남성들의 보편적 양상인 양 취급한 것도 문제다.

2030 남성들은 우경화·극우화했다 기보다 ‘진보에서 이탈했다’고 표현하

특정 진영에 소속감 없다
‘2찍남’이라고 조롱하더니
극우 프레임 씌운 진보
2030 남성이 동네북인가?

는 게 더 정확하다. 이는 경전의 차이보다 이들을 대하는 진보 진영의 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역사는 9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빌딩 화장실에서 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의 성격을 놓고 청년 남녀 간에는 ‘여성 혐오 범죄’라는 해석과 ‘조현병 환자의 묻지 마 살인’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갈등은 이윽고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냐 아니냐로 번졌다. 진보 진영은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문재인 정부에선 공

공기관장이 직접 성 인지 교육 자료에 등장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가정하곤 “화를 내기보다 자신은 가해자들과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려 노력하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2030 남성들의 반(反)진보 정서 아래에는 “예전엔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더니 이제는 극우로 매도한다”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사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2030 남성들은 딱히 보수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운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여전히 높고, 상법 개정 등 경제 현안에서도 여권과 방향성을 같이하는 게 적지 않다. 다만 특정 진영에 소속감이나 애착을 갖지 않는다는 데서 기성세대와 차이가 있다. 국방·외교·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한 태도를 보인다. 선거마다 국민의힘을 찍었다가, 민주당을 찍었다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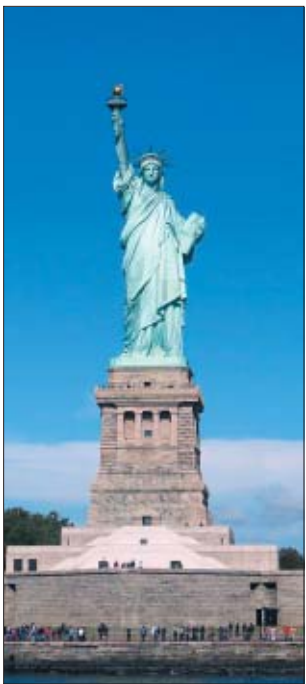
그런데 이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꽤 예민한 문제인 모양이다.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2030 남성들의 국민 의힘 지지율이 상승하자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들을 ‘국민의힘이나 지지하는 찌질이(2찍남)’라고 조롱하는 표현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번에 불거진 극우화 논란은 그다음 버전쯤 되겠다. 이렇게 특정 유권자 집단을 잠재적 범죄자나 극우로 일반화한 전례가 또 있을까. 2030 남성들을 애물단지로 바라보는 시선들은 여전히 있다. 동네북도 이런 동네북이 없을 거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88]

자유의 여신상

1886년 10월 28일 미국 뉴욕항 끝자락 리버티섬에서 ‘자유의 여신상’ 제막식이 열렸다. 프랑스 조각가 프레데리크 바르톨디(Frédéric Bartholdi·1834~1904)가 디자인한 이 거대한 조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제작됐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제국과 왕정을 오가며 완전한 공화정에 이르지 못했던 프랑스인들은 미국의 독립을 기리면서, 동시에 자유에 대한 갈망과 공화주의의 염원을 표현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이 조각은 미국을 위한 선물이자, 프랑스를 향해 자유와 국민 주권을 외치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보다 느렸다. 조각은 자금난과 정치적 상황에 부딪혀 독립 100주년보다 10년 늦은 1885년에야 완성됐다.



프레데리크 오키투스트 바르톨디, 자유의 여신상, 1886년. 철골에 동판, 높이 93m, 뉴욕 리버티섬 소재.

그나마도 받침대가 마련되지 않아 제막은 또다시 미뤄졌다. 이때 언론인 조셉 폴리처는 신문을 통해 ‘1센트라도 기부하면 신문에 이름을 실어준다’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약 12만 명의 소액 기부가 모여 마침내 기단이 완공됐다.

제막식 날 미국 대통령과 프랑스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거대한 여신상의 베일이 벗겨지자 뉴욕 하늘은 함성과 함포 포성으로 뒤덮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자리에 여성은 없었다. 초청 명단에 여성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행사장으로 가는 공식 선박에는 여성 탑승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그날의 ‘자유’는 남성들만의 것이었고, 여성을 위한 자리는 리버티섬에 우뚝 선 그 여신상 하나뿐이었다. 미국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건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1920년. 자유를 외치던 이들의 눈에 바로 옆의 빈자리는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説

‘거꾸로 한반도’ 지도 보는 주한 미군

스티븐 조스트 주일 미군사령관은 28일 “주일 미군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심화하고 있다”며 한 말인데, 문제는 주일 미군 강화가 주한 미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 전략권 이양과 함께 주한 미군 사령관은 중장으로 내리고, 현재 중장이 맡는 주일 미군 사령관을 대장으로 올려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미국은 이르면 8월 발표할 새 국방 전략(NDS)에서 주한·주일 미군의 새로운 운용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군은 이미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지시로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자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도를 보면 북한보다 대만이나 필리핀이 더 눈에 띈다. 주한 미군 사령부가 있는 팜택 기지를 기점으로 타이베이와 마닐라까지의 거리도 표기돼 있다. 미군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벌어질 경우 주한 미군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주한 미군 감축·이전 배치설이 끊임없이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은 “미국이 항상 모

든 곳에 있을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대해 “일본과 중국 사이의 항공모함과 같다”고 했고, “우리는 때때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이라며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지만, 미 국방장관은 “중국군이 리히설을 하고 있다”며 2027년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에 제2 전선을 만들 수도 있다. 심각한 일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방 분야 제1 핵심 과제로 전략권 전환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곧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략권 전환을 하겠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지 생각해야 한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외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지금 미군의 분위기로 볼 때 주한 미군이 격하돼 주일 미군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주한 미군은 날이 갈수록 감축될 수 있다. 그리고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상쇄할 만큼 큰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잘못하면 헛돈 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설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중앙선대위에서 이 공약 추진위원장도 맡았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공약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9개 거점 국립대의 교육 여건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가 6059만원, 거점 국립대 9개 학교 평균은 2450만원이다. 거점 국립대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개 이상을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해마다 3조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서울대가 임시 지옥의 정점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 최대 문제 중 하나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서울대 지

원을 깎아내리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교육비를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대 혁신이 전제돼야만 한다. 지금 거점 국립대들은 백화점식 학과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사립대는 사회 변화에 맞게 학과도 상당히 조정했는데 지방 국립대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편하게 하던 대로 하는 문화가 고착돼 있다. 경쟁과 혁신은 찾아볼 수 없다. 직선제 총장은 교수들이 싫어하는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부 예산을 쏟아부어도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 국립대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나눠 먹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별 특성과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엄격하게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한 번 교수가 되면 평생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 9개 거점 국립대를 모두 서울대와 같은 연구 중심대, 대학원 중심대로 만들 필요도 없다. 앞으로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는 거점 국립대가 등장하기를 기원한다.

무리한 상법 개정에 발미 주는 일탈 기업들

대표적인 저평가 기업으로 꼽히는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과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EB) 32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해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교환사채로 확보한 자금을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한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1조4000억원의 현금성 자산과 지분 매각 잔금 9000억원 등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새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

일부 기업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려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태광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21배로 코스피 평균(1.03배)보다 훨씬 낮다.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다. 태광산업 지분 5.95%를 보유한 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상법이 개정되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수 있는데 이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는데 태광산업은 자사주 소각을 못하게 만들어 주가 상승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여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현재 상법 개정안대로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가 추가되면 소액주주 소송이 남발돼 투자·인수합병 같은 전략적 결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전략적 투자나 인수합병을 소송이 두려워 못 하면 그 기업은 쇠락한다. 그 결과는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 하지만 그런 한편에서 태광산업 사례처럼 대주주의 비상식적 행태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작년엔 두산그룹이 매년 수천억 원 흑자를 내는 두산밥캣을 만년 적자 회사인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 했다가 주주들이 반발해 무산됐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상법 개정 찬성 여론이 높아졌다. 최근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에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일부 일탈 기업들이 상법 개정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계 전체의 합리적 우려까지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균형 잡힌 시각과 장기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 2023년 8월 한여름 가두농성 떠올려 보라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처리수엔 난리법석
- 왜,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조용해지는가?



▲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물고 늘어지며 거리로 나선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당대표. 이들의 비과학적 트집으로 인해 방사선 오염 물질 측정 등에 무려 1조 5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쓰여졌다. 이들의 선동으로 방사능 미역, 방사능 소금, 방사능 우유 등의 괴담이 돌았다. 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액은 추계되지도 않았다. © 서성진 기자

북한 방사선 폐수 서해 방류에 대해 왜 침묵하나?

뉴데일리
newdaily.co.kr

[편집자 주]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북한의 방사선 폐수 서해 무단 방류(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 보도)의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폐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을 던졌다. 민주당 대표 시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에 대해 단식농성까지 하며 가두 농성하던 것과는 달리, 아무런 조치와 반응을 왜 하지 않는지 따져 묻는 것이다.

다음은 그의 폐북 글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북한 우라늄 폐수 서해 방류 의혹... 정부는 즉각 대응해야》

북한이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를 서해로 방류했다는 의혹이 위성 분석 결과를 통해 공개되며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격 탐사 전문가인 **정성학** 박사가 공개한 2025년 5월 말 고해상도 위성 《월드뷰-3》 사진에 의하면, **평산 우라늄 공장의 침전지에서 배수로를 통해 폐수가 흘러나가는 장면이 명확히 포착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보다 방류량이 증가했으며, 폭 2m의 배수로를 따라 검은 폐수띠가 외부 하천으로 이어지는 모습까지 식별했습니다.

이제 곧 장마입니다. 집중호우를 틈타 고의적 대량 방류가 이뤄질 경우, 서해의 해양 생태계와 국민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성분의 폐수가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전무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이 군사경제선이어서 민간 접근이 어렵다며 관측의 한계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 7개 가운데 우라늄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오염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를 측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폐수가 아니라더라도 산성 폐수나 중금속 폐수가 해양으로 유입된다면 악영향은 자명합니다. 한강 하구나 서해 연안 측정 지점에서 이상 수치가 감지되지 않는지 즉각 조사하고, 감시의 사각지대를 찾아 조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단식까지 하시고, 국제사회를 향해 진서를 보내시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분노하셨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북한의 방사성 폐수 방류 의혹에는 왜 이리도 조용하십니까?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북한의 우라늄 폐수를 눈감아 주는 것이 평화입니까?

그것이 경제입니까? 그 사이 서해를 오염시키고 있는 폐수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은 누가 지켜줄지니까?

이재명 정부는 확고우면할 것 없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①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에 우라늄을 추가하고, 인천 이남에 편중된 감시망을 서해 북단과 예성강 하구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 ② 위성자료를 토대로 유입 경로를 정밀 조사하고, 탈북민과 내부 증언을 수집해 폐수 방류의 실체를 규명해야 합니다.
- ③ 아울러 IAEA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국제적 규탄과 대응을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해양 주권 앞에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출)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6월 30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64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